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인도

Republic of India

2020년 6월 26일 | 책임조사역(G3) 이주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287 천 km ² 	인구 13.7억명 (2019 ^e)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GDP 2조 9,400억 달러(2019 ^e) 	1인당GDP 2,152 달러 	통화단위 Rupee 	환율(US\$기준) 70.42 (2019 ^e) 

- 인도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연방공화국으로,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91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자유화 및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2015년 7%대의 성장으로 당시 6%대의 중국을 추월한 인도는 이후에도 수년간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며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2019년 명목 GDP 규모가 영국과 프랑스를 추월하여 세계 5위를 기록함.
- 세계 2위의 인구 규모 및 인구 절반이 25세 미만인 젊은 인구 구조를 보유하여 대규모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주요 거점 국가로 부상하였음.
- 2019년 5월 총선에서 압승한 모디(Modi) 총리와 여당은 하원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2024년까지 재집권하게 되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편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3. 12. 10 수교 (북한과는 1973.12.10)

주요협정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74년), 과학기술협력협정('76년, '06년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약('86년, '16년 개정), 투자보장협정('96년), 세관협력협정('06),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10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14년)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 출	15,055,543	15,606,221	15,096,302	철강판, 반도체,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수 입	4,947,847	5,884,707	5,565,259	석유제품, 알루미늄, 합금철, 정밀화학원료, 의약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0.3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1,259건, 6,675백만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e
경제성장률	7.9	8.2	7.0	6.1	4.3
소비자물가상승률	4.9	4.9	3.3	3.9	3.7
재정수지/GDP	-3.9	-3.5	-3.5	-3.4	-4.5

자료: EIU

대외환경 악화와 국내 수요 부진으로 경제성장 둔화

- 인도 경제는 모디 총리가 취임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7%를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주요 시장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및 투자 부진, 이로 인한 은행과 인프라 업체들의 유동성 감소, 국내 소비 위축, 세수 감소 등으로 점차 성장이 둔화되어 2019회계연도(2019년 4월 1일 ~ 2020년 3월 31일)에는 4.3% 성장에 그치며 2008~09년 세계 금융위기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인도 정부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전 국민 외출 및 이동 제한, 비필수 서비스 영업 금지 등 강력한 봉쇄령을 두 달 넘게 실시하여 산업생산과 소비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됨.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6월 8일부터 '1단계 봉쇄 완화 조치'를 시행하여 점진적인 경제활동 재개에 나섰으나 6월 23일 기준 일일 확진자 수가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등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경제활동 회복의 속도와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주요 조사기관 다수가 인도의 2020년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하여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인도 경제는 4월 산업생산 -55.5%(전년동기 대비), 제조업 PMI* 27.4, 서비스 PMI* 5.4를 기록하는 등 2분기 각종 경제지표가 급락하였음(2020년 인도 경제성장 전망: IMF -4.5%, IHS Markit -1.8%, EIU -5.8%, Moody's -4.0%).

* PMI(Purchasing Manager Index)는 50점을 초과할 경우 전월 대비 확장, 50점 이하는 전월 대비 침체를 의미하여 향후 경기전망을 판단하는 지표임.

인도중앙은행(RBI)은 2019년 중 135bp의 금리인하 단행, 2020년에도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 RBI는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하여 2019년 중 5차례에 걸쳐 135bp의 금리인하를 단행, 2019년 말 기준금리는 5.15%를 기록하였음.
- 2019년 기준금리 변동: 6.50%→(2월)6.25%→(4월)6.00%→(6월)5.75%→(8월)5.40%→(10월)5.15%
- 2020년 코로나19의 경제 악영향에 대응하여 3월 75bp, 5월 40bp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현재 인도의 기준금리는 4.0%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5월 금리 인하시 RBI는 경제성장 둔화 위험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밝힘.

국내경제

경기부양을 위한 만성적인 재정적자 지속

- 인도 정부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민생 안정, 에너지·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통합간접세*(GST) 시행과 조세개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도모해왔으나, 경기부양을 위해 2019년 9월 법인세율 인하(30%→22%)를 단행하여 세수 감소가 예상됨. 인도 재무부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정부 세입이 연간 1조 4,500억 루피(약 24조 4,560 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음. 2019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확대된 -4.5%를 기록함.
 - * 2017년 인도 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별로 난립해 있던 10여 가지 간접세 항목을 단일한 세제로 통합하기 위해 단일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를 도입함. 이는 석유제품·주류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적용되며, 품목별로 0%/5%/12%/28%의 4단계로 차등 부과됨.
- 2019년 12월 IMF는 인도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려 부채를 감소시키는 재정 건전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함.
- 2020년 5월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봉쇄조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조 루피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정책을 발표하였음. 이로써 인도 정부는 RBI의 통화정책 및 기존에 발표된 재정정책과 더불어 연중 GDP의 10%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인도 정부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목표치를 전년도(-3%)에 비하여 완화한 -3.5%로 설정하였으나 목표 내 관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e
경 상 수 지	-22,457	-12,114	-38,168	-65,599	-26,894
경상수지/GDP	-1.1	-0.5	-1.4	-2.4	-0.9
상 품 수 지	-136,884	-107,476	-148,134	-186,692	-154,106
상 품 수 출	272,353	268,615	304,107	332,087	331,342
상 품 수 입	409,237	376,090	452,241	518,779	485,448
외 환 보 유 액	327,840	336,583	385,104	369,798	426,880
총 외 채	484,989	471,852	511,484	521,391	567,855
총외채잔액/GDP	23.1	20.6	19.3	19.2	19.3
D.S.R.	9.9	9.1	9.1	9.5	9.9

자료: IMF, EIU, OECD

원유와 금의 소비량이 많고 수입 의존도가 높아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인도는 원유 수입이 전체 수입금액의 20% 이상(2019년 전체 수입금액의 21.3%)을 차지하고, 금(金) 장신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금이 수입금액 2위 품목에 해당하는 등 수입 수요가 커 매년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2019년에는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수입액 감소에 힘입어 상품수지 적자가 1,5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감소하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도 -0.9%로 축소되었음.
- 인도는 세계 3위의 원유소비국(2018년 499만 배럴/일)으로, 원유 수요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2020년에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축소가 예상됨.

외채상환능력

외채 구조 및 외환보유 규모 등 감안할 때 외채상환능력은 대체로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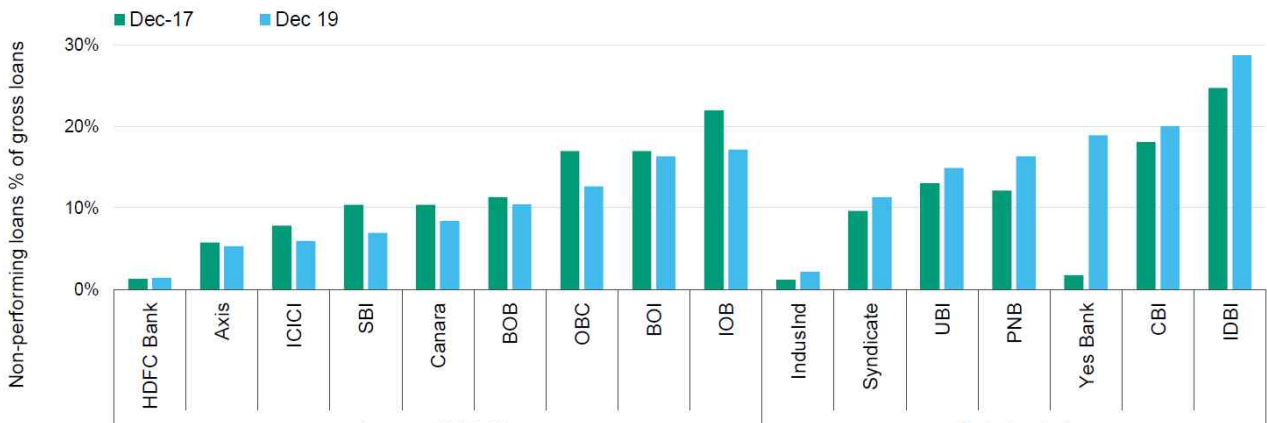
- 2019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약 4,270억 달러 규모로 월평균수입액 대비 7.3개월에 해당하는 양호한 수준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19.3%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말 기준 총외채 중 중장기 외채 비중이 약 81%로 외채구조가 양호함.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8년 9.5%에서 2019년 9.9%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9%대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구조적취약성

은행산업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

- RBI가 발표한 2019년 9월말 기준 인도 은행들의 평균 무수익여신(NPL) 비율은 9.1%로, 인도 은행권의 자산건전성은 취약한 편임. 특히 2020년 3월에는 자산 기준 10위(민간 4위) 은행인 Yesbank가 부실대출 급증으로 인한 재무 악화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여 RBI가 구제한 바 있음.
-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미 은행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은행권의 추가적인 건전성 악화가 우려됨.
- 한편, 인도 정부는 은행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월 1일자로 10개 공공은행을 4개로 합병, 개편하는 정책을 단행하였음.

인도 주요 은행들의 NPL 비율



* 자료: Moody's

기후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

- 인도는 열대 몬순 기후에 속하며 경작지의 절반 정도가 관개시설을 갖추지 않아 우기 강우량이 농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인도에서 농업의 GDP 구성 비중은 약 15%에 달하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농업 부문 생산성, 식료품 가격상승률, 농촌 지역 가계소득 및 소비, 정부지출 및 사회적 비용 등 경제 전반이 통제 불가능한 요소인 기후 변동(강우량)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원유 수입량이 많아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

- 인도는 세계 4위의 원유 수입국이며, 원유 수입량의 약 12%를 가장 가까운 원유 공급지인 이란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유가 변동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크게 영향을 받음.
- RBI는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인도의 GDP는 0.15% 감소하며 소비자물가를 0.2%p 올릴 것이라 분석함.

성장잠재력

세계 2위 인구 대국, 젊은 인구구조로 노동력이 풍부하나 노동시장 경쟁력은 부족

- 인도는 약 13.7억 명(세계 2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경제사회국(UNDESA)에 의하면 2024년에 중국을 넘어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 될 전망이다.
-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20년 추정치 기준으로 인구의 40% 이상이 25세 미만이고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67%에 달해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이 기대됨.
- 다만,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보고서에서 인도는 조사대상 141개국 중 종합 68위를 기록하였으나 노동자 숙련도 부문은 107위, 노동시장(유연성 및 동기부여) 부문은 103위에 그쳐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원유, 천연가스, 다양한 광물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 개발이 미진하여 향후 충분한 성장잠재력을 가짐.
- 인도는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과 금속, 비금속을 아우르는 다양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석탄 매장량은 약 2,930톤으로 세계 4위(전 세계 매장량의 10%)에 해당하며 이외에도 망간(세계 7위), 보크사이트(세계 5위), 다이아몬드, 철광석, 금, 은, 안티몬 등 80종 이상의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음. 2020년 2월, 기존에 확인된 인도 내 금 매장량의 5배에 해당하는 3천 톤 이상의 매장량을 보유한 금광을 신규 발견하는 등 추가적인 자원개발 가능성이 기대됨.

정책성과

경제개혁과 투자환경 개선 추진

- 모디 정부는 2014년 5월 취임 이래 경제개혁과 투자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모디노믹스(Modinomics) 추진을 통해 연 7~8%의 성장을 견인해왔으며, 인도의 경제규모(명목 GDP 기준)는 2017년 세계 6위, 2019년 세계 5위까지 성장하였음.
- 제조업 육성 정책인 'Make in India'는 모디노믹스의 핵심 정책으로 자동차·전자·섬유 등 25개의 육성 산업을 선정하였으며, 2014년 기준 14%였던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을 2022년까지 2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100개의 Smart City 건설,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등 5개의 산업 회랑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도시·지역 간 연계를 강화를 도모하고, 동 계획과 관련하여 초고속 열차 건설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2017년 이후 성장 둔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경기침체 우려로 보다 적극적인 경제 개혁과 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임.
- 세제 개혁, 민간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경제 개혁을 실시해왔으나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어 2019년에는 4.3%의 저조한 성장을 기록하였음. 코로나19와 봉쇄령에 따른 극심한 경제충격과 둔화된 성장 동력의 회복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개혁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정책성과

기업경영여건 지속 개선, 63위로 상승

- 2019년 10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비즈니스 환경(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전년도에 23계단 순위가 상승한 데 이어 또다시 14계단 순위가 상승하여 전 세계 63위를 차지하였으며, '세계 비즈니스 환경 개선폭이 가장 큰 10개국'에도 이름을 올렸음.
- 인도는 비즈니스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하는 등 꾸준한 개혁조치로 Doing Business 2020 평가기간(2018.6월~2019.5월)에 평가항목* 중 4개(창업, 건축 인허가, 통관, 파산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하였음.

* 창업, 건축 인·허가, 전력공급, 재산권 등록, 소액투자자 보호, 납세, 통관, 계약이행, 파산처리

4개 산업 분야에 대한 FDI 규제 완화 실시

- 2019년 8월 인도 정부는 FDI 유치 확대를 위해 관광업, 위탁생산(contract manufacturing), 단일 브랜드 소매점,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FDI 규제를 완화하였음.
- 이번 조치로 관광업과 위탁생산 분야에서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허용되었으며 디지털 미디어 기업의 외국인투자 지분을 한도가 26%로 상향 조정되었음. 또한 온라인 매장 개점 전에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을 열게 하던 소매점 관련 규제를 단일 브랜드의 경우 면제하여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이 예상됨.
- 특히 관광업 FDI 규제 완화는 자동승인경로(automatic approval route)를 통해 정부나 RBI의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이 석탄 채굴·판매 기업에 100%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당국은 석탄 채굴량과 관련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힘입어 2019년 인도 앞 FDI 유입액은 약 5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9% 증가하였음(UNCTAD).

정치동향

인도국민당(BJP)의 안정적인 연방의회 의석 확보로 독자적인 정책 추진 가능

- 2019년 4~5월에 걸쳐 치러진 총선 결과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기존 여당 인도국민당(BJP)이 단독으로 하원 과반 의석(543석 중 303석)을 차지하였음. 상원에서는 BJP와 연합정당으로 구성된 민족민주연합(NDA)이 250석 중 102석을 차지하여 과반 의석에 못 미치나, 이에 대항할 만한 결집된 야당 세력이 없어 독자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함. 이에 따라 모디 정부는 2019년 재집권 이후 시민권법 개정, 잠무-카슈미르 주 자치권 폐지 등 논란의 여지가 많고 격렬한 반대를 야기한 정책들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음.
- 단, 지방정부의 경우 수도인 델리 주에서 치러진 2020년 2월 지방선거 결과 지역정당인 보통사람당(AAP)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BJP는 참패하는 등 중앙에서 BJP가 가지는 집중된 권력이 지방에서는 분산되어 있어 시민권법 개정 등 이슈에 따른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함.

사회동향

시민권법 개정으로 종교·사회 갈등 야기

- 2019년 12월 인도 연방 상원은 인접국 출신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되 무슬림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동 개정안은 인접국 중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인도로 이주해 온 힌두교도, 시크교도, 불교도, 자이나교도, 파르시교도, 기독교도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착한 이들에게 인도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시민권 신청 대상자의 종교를 나열하면서 무슬림을 의도적으로 제외시켰으며, 종교를 시민권 부여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인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이번 법 개정은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여당 BJP가 인도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무슬림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반대하는 무슬림과 대학생 중심의 반대파와 힌두교도 중심의 찬성파 사이에 유혈 충돌이 수 차례 발생하였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한 2020년 2월 24~25일에 수도 델리를 중심으로 격렬한 시위가 발생하여 30명 이상의 사망자 포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카스트 제도가 남긴 폐해와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스트 기반 할당제를 저소득층으로 확대

- 2019년 1월 인도 하원과 상원은 공직 취업·대입 정원 할당제의 적용 대상을 하층 카스트에서 중·상층 카스트를 포함한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동 헌법 개정에 따라 연소득 80만 루피(약 11,36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도 카스트에 무관하게 할당제의 수혜 대상이 되며, 모디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적 안전망이 넓어졌다고 강조함.
- 1947년 인도 공화국 건국 당시 정부는 카스트에 의한 신분 차별을 철폐하고, 하위 카스트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앞으로 공직 취업·대입 정원을 할당하는 규정을 헌법으로 정하였음.

사회동향

- 2019년 인도의 1인당 GDP가 2,152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할당제 적용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모디 정부가 카스트 할당제에 대한 불만을 가진 중·상층 카스트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총선 전 개헌을 서둘렀다는 비판도 있음.
-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모디 정부 출범 이후 하층 카스트에 대한 범죄가 크게 늘어났으며 2018년 4월 카스트 할당제 반대 시위, 하층 카스트 보호 완화에 대한 반대 시위가 전국적인 규모로 벌어지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카스트 간 갈등이 확대됨.

잠무-카슈미르 자치권 폐지 및 통제 강화

- 카슈미르 지역은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할 통치(파키스탄이 서쪽, 인도가 동쪽)를 받고 있으며 힌두교국인 인도에 소속된 자치구인 잠무-카슈미르 지역은 무슬림이 인구의 대다수를 이루어 인도로부터의 분리 독립 운동을 지속해온 가운데, 힌두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모디 정권 출범 이후 갈등이 악화되었음.

카슈미르 인근 지역 지도



* 자료: Euronews

- 2019년 8월 5일 인도 정부는 잠무-카슈미르의 자치 기반을 제공해온 인도 헌법 제370항(Article 370)이 민주주의 발전과 부정부패 척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명령하였음. 이와 함께 이 지역에서 집회 금지와 통금령을 실시하고 인터넷을 무기한 전면 차단하였음.
- 1951년 도입된 이 조항은 외교·국방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동 지역의 자치권을 보장하여 독립적 법제, 국기 이용 등이 허용되며, 이에 근거하여 주 정부는 재산권과 시민권 규제를 통해 非카슈미르 인의 동 지역 내 부동산 취득 등 경제활동을 제한해왔음. 모디 정부는 이번 자치권 폐지를 통해 힌두교도 인구의 잠무-카슈미르 유입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인도 내 완전한 통합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임.
- 한편, 2020년 1월 10일 인도 대법원은 정부가 잠무-카슈미르 인터넷 연결을 무기한으로 차단한 조치가 국민 기본권 침해이자 통신 관련 법률에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판결하였으며, 인도 정부는 1월 25일자로 이 지역 인터넷망 사용을 제한적으로 재개시킴.

국제관계

파키스탄과 카슈미르 지역 분쟁 지속

-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영유권 분쟁으로 오랜 갈등을 겪어 왔으며, 특히 2019년 2월 14일 인도 중앙예비경찰대(CRP) 요원 44명이 풀와마(Pulwama) 지역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사망하면서 분쟁이 격화되었음. 당시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이 이번 테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공군기를 투입하여 파키스탄 내 테러 근거지를 공습하고, 이후 양국 간 총격전이 발발하는 등 긴장이 고조된 바 있음.
-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핵 보유국으로, 양측의 긴장관계가 지속되며 국경 지역에서 소규모 충돌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인도가 2019년 8월 잠무-카슈미르 지역의 자치권을 폐지하는 등 이 지역의 힌두화 노력을 계속하자, 카슈미르 지역의 무슬림 인구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파키스탄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였으며 2019년 9월 파키스탄 총리가 UN 총회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강조하며 카슈미르 분쟁 조정을 촉구하기도 하였음.

중국과 국경 분쟁 지속,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

- 인도와 중국은 약 3,500km에 달하는 구간에서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통제선(Line of Actual Control)을 사이에 두고 잦은 국경 분쟁을 지속해왔으며 남중국해 지역에서도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음. 2020년 5월 국경 분쟁지인 라다크 지역에서 대치하던 양국 군인 간 충돌이 발생하고 이후 수 차례 격투가 벌어지며 사상자가 발생하여 40여년 만에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함.

인도-중국 군사 충돌 지역



* 자료: BBC

- 2020년 5월 5일 라다크 지역에서 인도와 중국 군인들 간에 주먹질과 투석이 오가는 난투극이 벌어졌으며, 5월 8일에는 시킴 지역에서도 유사한 충돌이 발생하였음. 6월 6일 양국은 군사회담을 열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에 합의하였으나 6월 15일 라다크 지역에서 다시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여 인도군 20명이 사망하는 등 분쟁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임.
- 양국의 국경 충돌로 사망자가 나오기는 1975년 이후 처음이며, 이번 라다크 분쟁으로 인도 내 반중 감정이 악화되어 시진핑 주석을 물리치는 내용의 게임이 출시되고 중국산 물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음.

국제관계

- 인도는 중국의 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벵골만 7개국 협의체를 주도하는 등 지역 내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997년 설립된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는 인도·태국·방글라데시·미얀마·스리랑카·네팔·부탄 등 벵골만에 위치한 7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인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BIMSTEC는 2004년, 2008년, 2014년, 2018년 네 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음.

미국과의 협력 강화

- 인도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24~2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하여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 및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였음.
-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인도가 미국산 무기 약 32억 달러 규모를 도입하고, 양국의 무기 공동 개발을 위해 미국이 인도 측에 첨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인도가 추진 중인 6개의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에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함.
- 한편, 양국 정상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무역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책을 내지는 못하였음. 2019년 6월 미국이 인도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자격을 상실시키고 인도는 미국산 제품 28개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금액은 미미한 수준

- 2020년 3월말 기준 인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총 지원액은 254.9억 달러(단기 48.1억 달러, 중장기 206.7억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중장기 1.41억 달러로 0.6%에 불과해 채무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3등급(2020.06)	3등급(2019.06)
Moody's	Baa3(2020.06)	Baa2(2019.04)
Fitch	BBB-(2019.04)	BBB-(2018.04)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인도에 대해 투자적격등급 유지, 향후 등급추이 주시 필요

- OECD는 인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3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인도에 대해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Moody's는 2020년 6월 인도의 경기 부진 및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정부가 계획했던 경제 개혁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며 등급을 한 단계 하락하여 Baa3로 조정하고 전망은 '부정적'으로 부여하였음.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성장 둔화와 재정적자 확대가 전망되는 만큼 등급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인도 경제는 2014년 모디 총리 집권 이후 2017년까지 매년 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주요 시장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및 투자 부진, 국내 소비 감소 등으로 2018년 6.1%, 2019년 4.3%로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및 관련 봉쇄령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 인프라 개선 및 농촌 지역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최근 수년간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방역 및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이 늘어나면서 올해 재정수지 적자는 추가 악화가 불가피함.
- 2019년 총선에서 모디 총리와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정치적 안정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2019년 12월 인접국 출신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부여시 무슬림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이 통과돼 종교 차별 논란과 대규모 시위로 이어진 후 찬반 세력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경 지역에서 파키스탄 및 중국과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등 다양한 국내외 문제가 상존함.
- 2019년 GDP 대비 외채 비중은 19.3%로 낮은 수준이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9.9%로 양호해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